

###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서면으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서면조사만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약 1100개 기업이 사실상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중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세무조사 대신 우편에 의한 서면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조사기간을 현행 20일 내외에서 최장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립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기존 세무조사를 대신해 세무·회계 처리 유의사항, 재무비율 등을 상담해주는 '지도조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주식변동과 관련한 탈루 혐의가 단순·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편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 실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 정책자금 증액 등 금융지원 확대

정부와 은행, 주요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증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지난 7월6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황영기 우리은행장 등 6개 은행장, 한은 박재환 부총재보, 금감위 이우철 상임위원과 보증기관 및 증진공 이사장 등 주요 중소기업 금융 지원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우리경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1500억원 증액(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기 반영)하고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따라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재해 중소기업 전용자금 1100억 지원

올 여름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현장 복구인력지원단이 운영되고 재해 중소기업만을 위한 전용자금 11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7~9월 태풍, 호우 등 본격적인 재해발생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긴급지원체계 가동에 중점을 둔 '2005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해발생 중소기업의 긴급현장 복구지원을 위해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학생, 군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긴급현장 복구인력지원단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의 설비보수, 수리·철거 등 신속한 조정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계설비제작회사 및 기계설비수리 전문가 등 민간 전문기술인력을 기술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 시험분석 지원 강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총 323억원을 투입해 80종 108대의 최첨단 시험분석 장비를 확보, 중소기업체들의 수출 및 제품개발 시험분석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80억원을 투입, 산업분야별 범용성 및 활용도가 높은 첨단 시험장비 40종을 구입하고 국제규격시험능력(173종) 확보 및 수출기업 2천여 업체의 2만4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7개 시험연구원에 시험장비를 첨단화하는 배경은 ISO, IEC 등 국제표준에 따른 국내 시험검사 능력조사 결과 시험분석 능력이 국제규격과 비교할 때 60%에 불과하고 시험불가능 원인의 85%가 시험장비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신보, 소액특례보험 연장

신용보증기금은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활성화 및 신속한 자금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소액특례보험제도의 운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액특례보험제도는 인수금액의 3%를 연간보험료로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신보는 소액특례보험제도를 통해 건당 어음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인수하며, 최고 3천만원까지 인수가 가능하다.

또 건당 어음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의 인수가능 신용등급을 2단계 이상 낮춰주고 최대 5천만원까지 인수해줌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 관계자는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거래처 부도에 대한 염려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글로벌브랜드 육성에 30억원지원

기술과 품질경쟁력을 갖춰음에도 불구하고 OEM(주문자상표부착) 수출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자체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지난 7월9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키로 하고,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기업들이 브랜드전략 컨설팅, 해외시장에 적합한 브랜드개발, 국제상표 출원, 해외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할 경우 1억원 이내에서 매칭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업체도 1억원의 경비를 들여야 하므로 2억원의 단위사업비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견 수출업체로 글로벌브랜드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국내 수출 중소기업은 3만여개로 이중 OEM수출은 7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자체브랜드 수출이 65% 수준에 이른다.

## 중기중앙회 독도사랑 위문품 전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지난 7월10일 울릉 도동항에서 울릉경비대에 독도사랑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위문품은 복사기 1대, 노트북 2대, 컴퓨터 6대로 지난 5월 중소기업 주간 때 열렸던 '중소기업사랑 마라톤 대회'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한 것. 위문품 전달식은 독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강한 바람 때문에 입도가 불가능해 울릉항 현지에서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일행이 경비대에 전달했다.

## 중소기업 우수제품 상품화 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의 우수제품 상품화 대출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정사업본부가 조성한 1조원 규모의 예치금을 재원으로 운용하며 우수제품을 개발했으나 자금,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대출보다 1~2%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하는 것.

기보는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업은행이 공모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 신용보증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제품 상품화에 필요한 운전과 시설자금에 대해 최고 10억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기보 관계자는 "이 제도로 인해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자금조달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사업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단체·집단소송 도입 경영 위축 우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경영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제여건을 무시한 소비자관련 단체 및 집단 소송 입법 논의와 관련, 소비자보호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법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기본법안 6건과 식품안전기본법안 5건, 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 1건 등 모두 12건의 관련법이 제출돼 있다. 중앙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의 국내 여건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소비자 소송법이 발달한 미국조차도 지나친 남용의 폐해를 막고자 소송의 제한을 담은 법안을 마련 중인 반면 우리는 안전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가 충분치 않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기업 스스로가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으로 인해 상담·분쟁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음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CEO 70% "한국경제 장기불황 진입"

대부분의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현재 경제국면을 '장기 불황 국면 진입초기'나 '이미 장기불황이 진행중'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CEO포럼은 최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회원 CEO 71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우리경제의 현재 국면에 대해 43.8%가 '장기불황 국면 진입초기', 27.1%는 '장기불황국면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시적 경기 위축'이란 응답은 20.8%, '정상적 순환국면'은 8.3%였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1%가 '3.5~4.0%', 43.8%가 '3.0~3.5%'로 예상했고,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3.5~4.0%'(41.7%)가 가장 많았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은 '장기 성장잠재력 저하'(44.7%)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내수침체지속과 저소득층 확대'(23.7%), '기업투자 부진'(21.1%)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국내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정치논리 확산에 따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확대'(40%), '높은 임금 및 공정용지 가격 등에 따른 채산성 확보의 어려움'(30.9%) 등을 꼽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성장 중심으로 국정운영 전환'(45.1%), '기업관련 정책의 일관성 확보'(17.6%) 등을 요구했다.

## 중기청 해외시장개척요원 성과 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위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요원'들이 중소기업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지난해 해외 67개국 93개 지역에 파견된 884명의 해외시장개척요원들이 총 5500만달러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파견자 88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73.5%인 650명이 응답했다.

## 기업 경영수준 진단 → 해결방안 제시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국내 기업들이 전문 경영컨설턴트로부터 경영수준을 진단받은 후,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제시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 제도를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키로 했다. 생산성경영체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란 기업 경영시스템의 혁신역량 수준을 심사하여 기업의 현재 수준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혁신과제를 제시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시범사업에 참가한 10개 기업 관계자들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을 통해 기업의 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증 후 추가적인 컨설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자부는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운용요령을 하반기 중(8월 계획)에 고시한 후,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 업체 모집

중소기업청은 '신기술 아이디어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8월10일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평가 사업은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제품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종업원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f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벤처페어 참가업체 모집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10월3일부터 12월2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한국 벤처 페어 2005'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한국기술벤처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벤처 페어는 우수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해외 마케팅 활동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에 해외 비즈니스 상담·선진기술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전시회다.

## 중기청 '혁신스타' 4명 선정

중소기업청은 최근 상반기 직원들의 업무실적과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해 각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혁신스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직원은 ▲오기웅(서기관, 혁신과제부문), ▲이인섭(사무관, 민원친절인부문), ▲김순태(6급, 혁신제안부문), ▲김성용(연구사, 업무혁신부문) 등 4명이다. '혁신스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표창, 근평가점, 포상금 30만원, 도요타자동차 혁신학교 연수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중소기업청 혁신스타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영예를 안게 된다. 간부급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오기웅 서기관(32, 정책총괄과)은 중기청내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정책통이다. 지난 7월 개최된 혁신경진대회에서도 '고객맞춤형·성과중심형 중소기업 정책정보 및 개선방안'을 발표해 혁신과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서울시 금고은행에 우리은행 선정

서울시는 2006년부터 5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시는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재무구조 건전성, 지역사회 기여도, 시와의 협력 사업 추진계획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최고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시금고은행은 평균잔액이 3조원, 1년 운용자금이 최대 18조원에 이른다. 우리은행은 제안서에서 5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1300억원을 출연,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창업자를 지원하는 등 수익금 일부를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금고은행 공모에는 우리은행을 비롯, 하나 신한 조흥 기업은행 등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현장어로 76% 해결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한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의 실적이 좋다고 판단, 하반기에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150~200개 중소기업에 모두 500여 명의 체험단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및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체험단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연말에 체험단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활약을 보인 공무원과 대기업 임직원에 포상을 하고, 체험단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혁신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6월 말까지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506명을 5차에 걸쳐 196개 중소기업에 파견, 488건의 현장어로 사항들을 발굴, 76%인 369건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125개 중소기업을 방문해 182건의 애로사항을 발굴, 이중 152건을 해결했다. 488건의 애로사항은 자금부문(100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력·교육(74건), 판로 개척(67건) 등의 순이었다.

## 중소기업은 고졸자 선호

고학력 청년실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는 고졸 구직자가 훨씬 쉽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의 최근 3년간 도내 구인·구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77% 이상이 고졸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작 구직을 희망하는 이들의 65% 이상은 전문대졸 이상이어서 구인·구직자간의 불균형이 심했다. 이에 따라 고졸자를 제외한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는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고용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고졸자를 선호하는 것은 임금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은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실업자 양산의 한 원인인 '학력인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업단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시급

국내 중소기업은 산업단지내 공동물류센터 조속 건립과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개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지난 상반기동안 부산 녹산공단, 신평·장림공단, 경남 창원공단, 울산공단 등 전국 11개 공단을 방문, 현장 투어한 결과를 토대로 발간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사업체 295만3천여개의 99.8%와 전체 종업원수 1200만여 명의 8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하락, 내수 침체 지속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금융·세제나 인력 운용 부문의 법령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